

세상읽기

시민운동에서 본 노동운동

이재명

참여연대 간사

오즘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날카롭다. 특정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이든, 아니면 시민운동 진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든 반갑기 그지없다. 비판에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론바 진보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점은 한층 고무적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연대

누구나 인정하듯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산물이다. 기층 민중의 투쟁없이 오늘의 시민운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적자(適子)인지 서자(庶子)인지는 좀 더 시간의 경과가 있은 후에 판단할 일이다. 선부른 판단으로 인해 서로간의 불신과 상처를 남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개혁과 진보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정과 무관한,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시기와 무시, 냉소의 시선 속에 자리잡고 있는 비판이 쏟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곤한다. 좌익소아병은 멀리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고속성장을 해왔다. 뼈대도, 그렇다고 살도 없는 머리만 커져있는 가분수의 형상을 하고서 말이다. 지난 5년간 참여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우리 사회에 진보적 시민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가혹하기까지 한 자기 성찰이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은 없고 평분만 남아있는 초라한 현주소에 진정 안타까워 해야 할 이들은 바로 진보와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이다. 시민운동 없는 진보와 개혁은 그만큼 더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보세력, 특히 노동운동과 진보적 시민단체의 연대이다. 지난 1년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유리한 정치적 공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결국 만족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중단없는 개혁을 강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의 사회세력화로 가능하다. 외양과 형식만을 연대의 관건으로하는 정치적 고려는 추후의 문제이다. 험난했던 지난 시기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성과물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진보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로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연대의 당위가 아니라 왜, 무엇을 가지고 연대해야 하는가이다.

한국노동운동의 성장

한국 노동운동은 꺼져가는 전세계 노동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의기소침해진 세계의 노동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파업 현장은 노동자 연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기도하다. 그러나 시민권의 확대를 노동자의 실질적 힘의 증대의 지표로 본다면 한국 노동자의 정치·사회·법적 지위는 별반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노동자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할 때 노동계급 정치가 가능하며, 노동계급정치가 존재할 때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가 진척될 수 있다. 시민권의 확대는 노동운동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서구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단결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고용보장, 연금, 복지혜택, 교육기회, 공공시설 확충 등 시장 이외의 논리로 전개되는 장치들은 모두 노동자가 제도적 질서 내에서 하나의 정치·사회세력으로 조직화됨으로써 가능했다. 노동자의 조직된 힘은 사회복지의 향상과 공공선을 강제하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반복되면서 하나의 관행, 전통 혹은 문화가 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장해왔다. 즉, 관행과 전통과 문화는 독자적인 영역이 아닌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세계 각국의 노동상황을 보면 조직률이 높을수록, 노조가 중앙집중적일수록 노동자의 복지, 인간다운 권리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을 진전시키고 중간계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민층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

노동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조직화 과정은 곧 투쟁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는 노조의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노동운동의 발전은 노동운동이 얼마나 노동자 자신들을 포함해서 가족, 지역공동체, 시민, 종교집단 등 노동운동 밖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그들을 후원,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자본가로 대표되는 반노동적 권력과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동료 혹은 자기 계급안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현실은 사회적 인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민운동이 '시민있는 시민운동' 즉,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노동운동 또한 사회세력화가 억제되어 있다. 금번 지하철 파업에서 보여지듯 '파업만은 안된다' 또는 '시민의 밤을 불모'로라는 단순한 논리가 여전히 통용되는 낮은 시민의식과 그로 인해 시민단체는 파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조성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노동운동의 발전은 노동운동이 얼마나 노동자 자신들을 포함해서 가족, 지역공동체, 시민, 종교집단 등 노동운동 밖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그들을 후원,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본가들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고용창출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생산성 하락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또 이를 활용해 중간계급을 원군으로 확보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으로 중간계급, 아니 동료 노동자를 얻을 수 있는가? 즉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해를 국가, 사회의 이해로 호도하면서 중간계급을 유인할 때 노동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중간계급에게 설득하고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통해 과시하며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의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기존의 법에 의거해서도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이유는 노동자의 조직적인 힘, 그리고 시민사회 힘이 법을 강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9년 이후 사용자측이 노조약화의 방법으로 가장 흔히 활용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글 자본주의'의 논리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간계급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계급적 이해와 시민적 이해의 상관관계

노동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계급적 이해와 시민적 이해가 차별화 된다는 것은 사실의 일면만이 부각된 것일 뿐 적어도 한국 자본주의의 조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노동운동의 역량증대는 시민운동의 성장과 배치되며 보다는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때한 형태로든 중간계급의 성장이 두드러진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사회세력화는 곧 사회내 원군(援軍)의 획득을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19세기 상황과 반봉건혁명을 거치지 않은 채 뛰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들어선 20세기 후반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전자와 가장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과거 19세기 노동자들은 정치사회적 투쟁의 유일한 주체였지만, 20세기 후반은 수적으로 다수이며 따라서 사회적 힘의 역할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중간계급과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급으로 대변되는 시민운동의 지평을 토대로 이를 활용하는 유연한 전술의 채택은 불가피하다.

세계화된 경제질서의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의 신흥중진공업국에서의 노동자의 재생산 조건이 과거의 경제질서와는 크게 변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개양상은 물론 계급세력화의 성격과 방향 역시 19, 20세기 선진공업국의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자기 계급의 협소한 이익인 임금·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주택, 복지, 직업훈련, 남녀평등 등 사회적 이슈를 내걸고 그것을 교섭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편협한 계급이익을 벗어나 전체 공동체의 문제를 사고하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과제를 양보하며,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혜개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을 벗어난 정책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단순한 임금인상 투쟁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혜개모니 능력은 주로 노동운동과 중간층 주도의 시민운동과의 연대 과정, 선거 시의 후보전술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험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오랜 세월 지배해온 한국 상황은 제도정치 혹은 중앙의 여론형성권에서의 중간층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의 힘이 막강한 오늘의 사회 상황에서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우호적 여론의 조성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하철 파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자의 '사회세력화' 절실

노동운동이 자기 계급의 협소한 이익인 임금·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주택, 복지, 직업훈련, 남녀평등 등 사회적 이슈를 내 걸고 그것을 교섭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해제모니의 장악에는 문화적 능력이 요구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정치적 역량은 곧 문화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태도, 사고방식, 일에 대한 관점,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개척할 때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임금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돈의 논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논리', 새로운 도덕성의 원칙을 생산 대중들이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은 이제 한국의 역사,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서기 위해 지난 시절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관행을 능동적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간계급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자본가와 노동운동이 벌이는 가장 큰 전투의 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노동자는 정부나 기업가가 주창하는 바 임금인상과 복지확충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적절히 비판하거나, 반대 논리로 중간층과 노동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중간층의 획득은 물론 노조조직화의 확대도 어렵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성장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세계개혁, 환경오염, 교육확충, 직업훈련, 교통망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와 연대하고 그것을 입법화하지 않는 한 노조조직화와 노동자의 영향력 확대에 비노동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데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란 노동자의 조직인 노조가 사회적 여론형성, 의제 설정,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히으로써 결정과정에 하나의 주체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건에서 자본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하나 노동자측도 비판할 일은 아니다. 정부와 자본가의 정책적 오류로 중간계급이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낄 때,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노동운동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점점 더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도 결국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척정도는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향상의 정도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고, 역으로 노동자의 조직화와 계급적인 연대의 심도를 확인하면 한국의 민주화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서구에서 노동계급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시민권의 향상은 동시에 노조조직의 관료화 보수화, 노조간부의 부패,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 환경운동 및 새로운 사회운동과 조직노조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선진국 노동운동의 이러한 결함은 80년대 이후 세계화된 경제질서 하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노동정치는 새로운 성격을 갖는다. 이른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수평적인 연대, 계급단결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럽식의 계급적 실천의 방식과 보다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미 중간계급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조건에서 사회변혁의 '유일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지도적인 집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점, 이미 고착된 정당구조, 이익대표구조의 틀바구니를 비집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성원의 테두리를 정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시켜나는 운동의 전략에 호소한다는 점, 히틀만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밑으로부터 참여를 실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계급정치, 이익집단정치와도 다른 사회운동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20세기 후반의 노동운동은 순수한 계급운동으로 등장하였다기보다는 군부의 퇴진과 민주화, 사회개혁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능성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다. 굳이 앞뒤 또는 개량화의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이 보인다. 도덕적 책임이 전제되는 한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운동의 영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상호간의 연대는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의 열

운동의 영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상호간의 연대는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의 열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대의 전술을 구사해야한다.

려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대의 전술을 구사해야한다.

'민중과 함께' 하려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간사로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4개월동안 연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시민운동의 개량화가 이 시대의 핵심과제를 교란하고 운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참여연대가 현저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는 빼아픈 층고 앞에는 머리를 조아려 경청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최소한 '친노동적 시민운동' 혹은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적은 없다. 이미지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사항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스스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반성하고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또한 참여연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지형상 민중운동적인 쟁점과 시민운동적인 쟁점들이 결코 대립지점에 서 있지 않다고 보고 민중운동전영과의 연대를 참여연대 연대사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결론에 대신하고 싶다. ♦